

OECD 국가의 아동가족복지지출 현황과 효과성 비교¹⁾

Family Expenditures and Its Effectiveness among OECD Countries

김미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1. 서언

최근 OECD 국가에서는 아동의 삶의 질 수준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동안은 빈곤퇴치, 영아사망률 감소 등과 같은 주로 물질적인 복지수준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면, 최근에는 선진복지국가에서 물질적인 풍요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삶의 질 수준은 개선되지 않음을 목도하면서, 물질적 측면 뿐 아니라 비물질적인 삶의 질을 동시에 파악하면서 총체적인 삶의 질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아동을 위해 최소한의 복지만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학력제일주의 풍토, 상업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 등은 아동의 삶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아동은 과중한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서가 피폐화 되고 있다. 이로 인한 도피성 조기 해외유학, 자살, 왕따, 비행 및 각종 중독 등의 발생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의 조사에 의하면 전체 서울 거주 중고등학생의 3분의 1이 정서장애를 갖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아동에 대한 조기 지원을 통해서 아동의 잠재역량이 개발될 수 있으며,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아동의 삶의 질이 제고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관심과 함께 실질적인 복지제공이 필요하다. 아동에 대한 복지지원은 지출규모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주요 OECD 국가들의 아동(가족)복지지출 규모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현황과 비교하였고, 아울러 이러한 복지 지출이 삶의 질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아동빈곤율을 통해서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아동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향후 우리 사회가 어느

1) 본고는 '김미숙·홍석표·정재훈·김기현·안수란(2010). 아동복지정책 유형과 효과성 국제비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 일부를 요약 정리한 것임.

정도의 복지지출 수준을 제고해야 할지 판단하는데 준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아동가족복지지출의 범위와 유형

아동가족복지지출²⁾ 항목은 국가마다 매우 다양하다. OECD에서는 아동가족복지지출의 국가별 비교를 통해서 크게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로 나누어서 접근하고 있다.³⁾

1) 현금급여

현금급여에는 가족수당, 육아휴직, 기타 관련 급여가 있다. 가족에게 제공되는 현금급여에는 출산수당, 군인가족 수당, 장애아동수당, 취약가족에 대한 공공부조 등과 같은 수당이 있고, 가족수당을 보충하거나 대체되는 세제혜택(tax credit)이 있다. 국가에 따라서 가족수당과 세제혜택을 둘 다 제공하기도 하고, 하나만 제공하기도 한다. 영어권 국가에서는 세제혜택이 가족수당이나 소득공제를 대신하고 있다. 반면, 캐나다,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페인 등은 현금급여와 함께 부가적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육아휴직은 고용과 관련된 것으로 유급과 무

급이 있다. 이는 임신, 출산, 입양시에 제공된다. 모성휴가는 여성에게 제공되고 일반적으로 출산 다음에 제공된다. 반면 부성휴가는 아버지에게 제공되는데 일반적으로 부모 모두 혹은 한쪽이 사용할 수 있고,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육아휴직에 대한 지출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인데, 1980년에는 가족 현금급여의 9%를 차지하던 것이 2001년에는 14%로 증가하였다.⁴⁾ 대부분의 국가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늘렸고, 일부 국가에서는 육아휴직 수당을 증액하였다. OECD국가의 평균 육아휴직 기간은 1980년에는 20주이었는데, 2000년에는 40주로 증가하였다.

이 밖에 기타 현금급여란 한부모가족, 저소득 가족에 대한 보충급여, 특별한 가족(군인가족, 공무원가족 등)에 대한 주기적 혹은 일시적 급여를 말한다. 이는 매우 다양하므로 국제비교하기 어려운 항목이다. 1980년에서 2001년 사이에 기타 현금급여는 2배 이상이 증가하였고, 현금급여의 종류도 26개에서 42개로 확대되어 증가 추세를 알 수 있다.

2) 현물급여 (Family Benefits in Kind)

현물급여란 물품이나 서비스, 비현금 이전(noncash transfer)을 말한다. 가족을 위한 현물급여는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현물급여 서비스의

2) OECD에서는 가족복지지출(Family Expenditures)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본 고에서는 아동복지지출의 중요성을 부각하기 위해서 필자가 아동가족복지지출이라고 명명하였음.

3) Gabel & Kamerman(2006). Investing in Children: Public Commitment in Twenty-one Industrialized Countries, Social Service Review, pp.239~263.

4) Gabel & Kamerman(2006). Investing in Children: Public Commitment in Twenty-one Industrialized Countries, Social Service Review, pp.239~263.

유형에는 아동보호, 조기유아교육, 장애아동 지원, 취업모 지원, 아동발달역량 강화, 아동취학 준비 등이 있다. 기타 가족을 위한 현물 급여에는 아동돌봄 관련 서비스, 레크리에이션, 방과 후 서비스,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 대인 서비스(정보제공, 상담서비스 등), 취약집단에 대한 현물급여 등이 있다.

OECD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1980년에는 78종이었던 현물급여가 2001년에는 135종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돌봄과 가사지원 서비스의 지출은 지난 21년간 131퍼센트 포인트 증가하였다. 조기유아교육 및 돌봄서비스(ECEC: Early Child Education and Care Services)도 상당한 증가를 하였다.

현금과 현물을 포함한 아동가족복지지출의 규모는 다음 절에서 복지국가유형별 및 연도별로 소개하였다.

3. OECD 국가의 아동가족복지 지출 비교

1) 복지국가 레짐별 아동가족복지지출 비교

여기서는 아동가족복지지출 수준을 에스핑-엔더슨이 제시한 복지국가 레짐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OECD 데이터에서 포함시킨 아동가족복지지출의 항목에는 세제혜택 항목은 제외되어 있고, 나머지 가족정책과 관련된 항목은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는 가족수당(family allowances), 육아휴직 및 휴직 급여(parental leaves and related benefits), 현금 급여(other cash

benefits), 아동돌봄 및 가사지원 서비스(child-care and home-help services), 기타 현물 서비스(other in-kind services) 등이 포함된다. 복지국가 레짐에는 자유주의 복지국가, 보수주의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가 있다.

분석 결과 <표 1> 및 [그림 1]에 제시된 것과 같이 아동복지지출을 가장 많이 하는 복지국가 유형은 사민주의 국가로 나타났는데, 2007년 현재 GDP 대비 평균 3.071%를 지출하고 있었다(OECD, 2010). 그 다음은 보수주의 국가로 2.339%이고, 자유주의 국가는 1.426%로 가장 적었다. 참고로 남유럽국가 평균을 살펴보았는데, 1.217%로 나타나 자유주의 국가보다 더 낮았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자유주의 국가 중 영국과 호주는 아동가족복지지출 비율이 높은 편이라는 것이다(영국: 3.243%, 호주: 2.449%). 반면, 보수주의 국가인 독일과 스위스, 네덜란드의 아동가족복지지출은 각 1.831%, 1.262%, 1.990%로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OECD 어느 국가보다도 가장 낮은 0.458%에 불과한 상황이다. 특히 1%가 다 넘는 남유럽의 모든 국가보다 더 낮고, 미국(0.657%)과 일본(0.956%)보다도 낮은 최저의 수준이다. 지난 17년간 지출수준은 조금씩 상승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OECD 국가 중 자유주의 복지국가 평균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책적 마인드가 필요하다.

GDP 수준 대비 아동가족복지지출 규모를 보았을 때도, 우리나라는 OECD 다른 국가에 비해서 지출수준이 낮았다. 우리나라와 GDP 수준이 비슷한 포르투갈이나 그리스는 지출수준이 모두 1% 이상이나, 우리나라는 0.5%를 밑돌고

표 1. 복지국가 유형별 GDP 대비 아동가족복지지출 비중

(단위: %)

| 국가 | | 1980년 | 1985년 | 1990년 | 1995년 | 2000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
| 자유주의 | 호주 | 0.929 | 1.127 | 1.483 | 2.698 | 2.891 | 2.735 | 2.582 | 2.449 |
| | 캐나다 | 0.749 | 0.699 | 0.589 | 0.786 | 0.958 | 1.050 | 0.949 | 0.956 |
| | 일본 | 0.472 | 0.446 | 0.364 | 0.516 | 0.646 | 0.810 | 0.791 | 0.792 |
| | 한국 | - | - | 0.031 | 0.064 | 0.110 | 0.256 | 0.511 | 0.458 |
| | 영국 | 2.275 | 2.253 | 1.892 | 2.314 | 2.686 | 3.156 | 3.162 | 3.243 |
| | 미국 | 0.792 | 0.626 | 0.472 | 0.613 | 0.738 | 0.655 | 0.662 | 0.657 |
| | 평균 | 1.043 | 1.030 | 0.805 | 1.165 | 1.338 | 1.444 | 1.443 | 1.426 |
| | 영국 제외 | 0.736 | 0.725 | 0.588 | 0.935 | 1.069 | 1.101 | 1.099 | 1.062 |
| 보수주의 | 오스트리아 | 3.143 | 2.807 | 2.555 | 3.072 | 2.805 | 2.833 | 2.724 | 2.603 |
| | 벨기에 | 2.992 | 2.593 | 2.253 | 2.269 | 2.658 | 2.607 | 2.596 | 2.560 |
| | 룩셈부르크 | 1.718 | 1.543 | 1.948 | 2.624 | 3.117 | 3.569 | 3.372 | 3.134 |
| | 프랑스 | 2.428 | 2.684 | 2.495 | 2.713 | 3.017 | 3.006 | 3.006 | 2.995 |
| | 독일 | 1.856 | 1.372 | 1.522 | 2.120 | 2.054 | 2.081 | 1.775 | 1.831 |
| | 스위스 | 1.018 | 0.977 | 1.006 | 1.162 | 1.280 | 1.347 | 1.303 | 1.262 |
| | 네덜란드 | 2.503 | 2.143 | 1.666 | 1.323 | 1.480 | 1.688 | 1.876 | 1.990 |
| | 평균 | 2.237 | 2.017 | 1.921 | 2.183 | 2.344 | 2.447 | 2.379 | 2.339 |
| 사회민주주의 | 덴마크 | 2.793 | 2.596 | 3.250 | 3.838 | 3.281 | 3.383 | 3.382 | 3.288 |
| | 핀란드 | 1.853 | 2.557 | 3.200 | 4.052 | 3.026 | 2.967 | 2.927 | 2.828 |
| | 노르웨이 | 1.802 | 1.884 | 2.738 | 3.550 | 3.049 | 2.835 | 2.743 | 2.813 |
| | 스웨덴 | 3.902 | 4.103 | 4.417 | 3.772 | 2.950 | 3.264 | 3.394 | 3.354 |
| | 평균 | 2.588 | 2.785 | 3.401 | 3.803 | 3.077 | 3.112 | 3.112 | 3.071 |
| 남유럽 국가 | 그리스 | 0.310 | 0.321 | 0.676 | 1.039 | 1.013 | 1.104 | 1.082 | 1.086 |
| | 이탈리아 | 1.077 | 0.906 | 0.761 | 0.555 | 1.156 | 1.310 | 1.390 | 1.398 |
| | 포르투갈 | 0.647 | 0.609 | 0.697 | 0.713 | 0.984 | 1.176 | 1.159 | 1.153 |
| | 스페인 | 0.472 | 0.262 | 0.321 | 0.415 | 0.966 | 1.176 | 1.198 | 1.230 |
| | 평균 | 0.627 | 0.525 | 0.614 | 0.681 | 1.030 | 1.192 | 1.207 | 1.217 |

주: 분석의 대상가구에는 아동이 없는 부부가구, 독인가구 등이 포함되어 있는 한계를 지님. 이보다 더 유용한 자료가 없어 부득이 이를 활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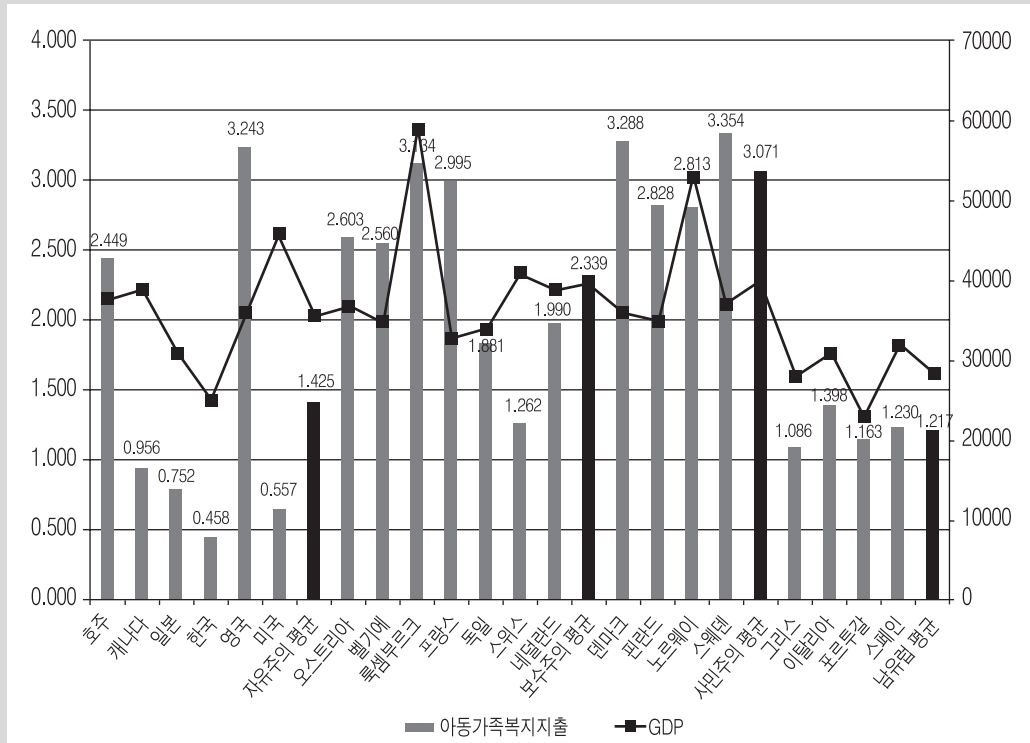
자료: OECD(2010). Social Expenditure Database, <http://stats.oecd.org>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재원마련에 있는데, 조세부담이나 조세저항 없이 어떻게 아동과 가족에 대한 복지지출 수준을 제고할 수 있을런지에 대한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

지난 27년간 복지국가 레짐별 아동가족복지지출의 추이를 모든 레짐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림 2]에 제시하였다.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1990년을 제외하고 약간의 증가의 추세에

그림 1. GDP 대비 아동가족복지지출 국가별 비교(2007년)

(단위: %)



주: 분석의 대상국가에는 아동이 없는 부부가구, 독신가구 등이 포함되어 있는 한계를 지님. 이보다 더 유용한 자료가 없어 부득이 이를 활용함.

자료: OECD(2010). Social Expenditure Database, <http://stats.oecd.org>

있다. 1980년대에는 1%이던 것이 점차 상승하여 1.5%대에 육박하고 있다.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1990년도까지는 약간 감소하다가 약간 증가추세이다가 최근에는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보수주의 국가의 경우는 아동가족복지지출의 변화가 심하지 않은 가운데 안정적인 2%대를 보이고 있다. 서민주의 복지국가는 1980년부터 1995년까지는 급격히 증가하다가, 1995년을 기점으로 감소 후 정체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남유럽 국가는 전체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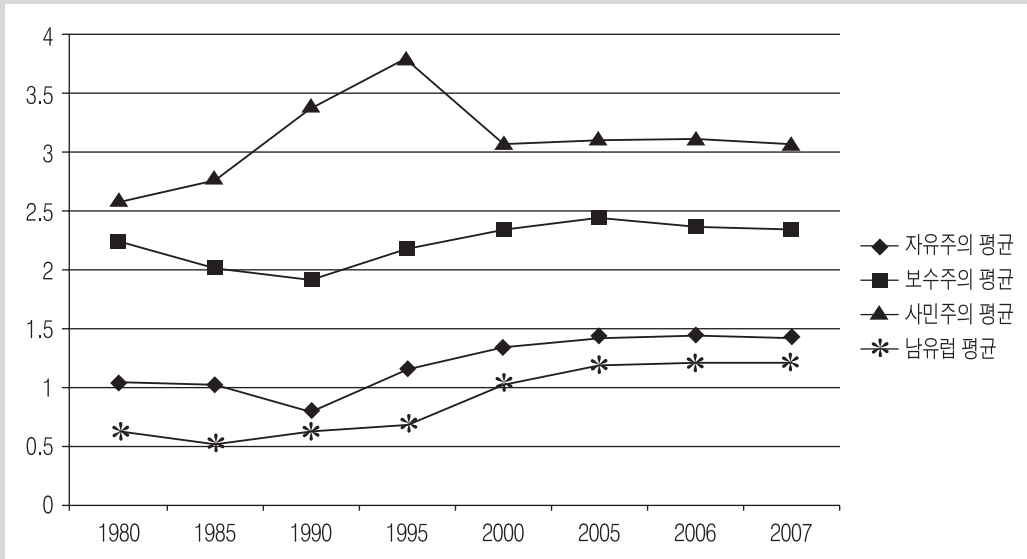
비중은 낮으나 증가의 비율은 비교적 높은 편이다. 최근에는 자유주의 복지국가 지출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특히 남유럽국가 중 스페인의 약진이 눈에 띄고, 2007년 기준 남유럽국가 평균(1.062)을 상회하고 있다.

2) 아동가족복지지출 유형별 추이비교

다음에서는 GDP에서 차지하는 아동가족을

그림 2. 복지국가레짐별 GDP 대비 아동가족복지지출(1980~2007년)

(단위: %)



자료: OECD(2010). Social Expenditure Database, <http://stats.oecd.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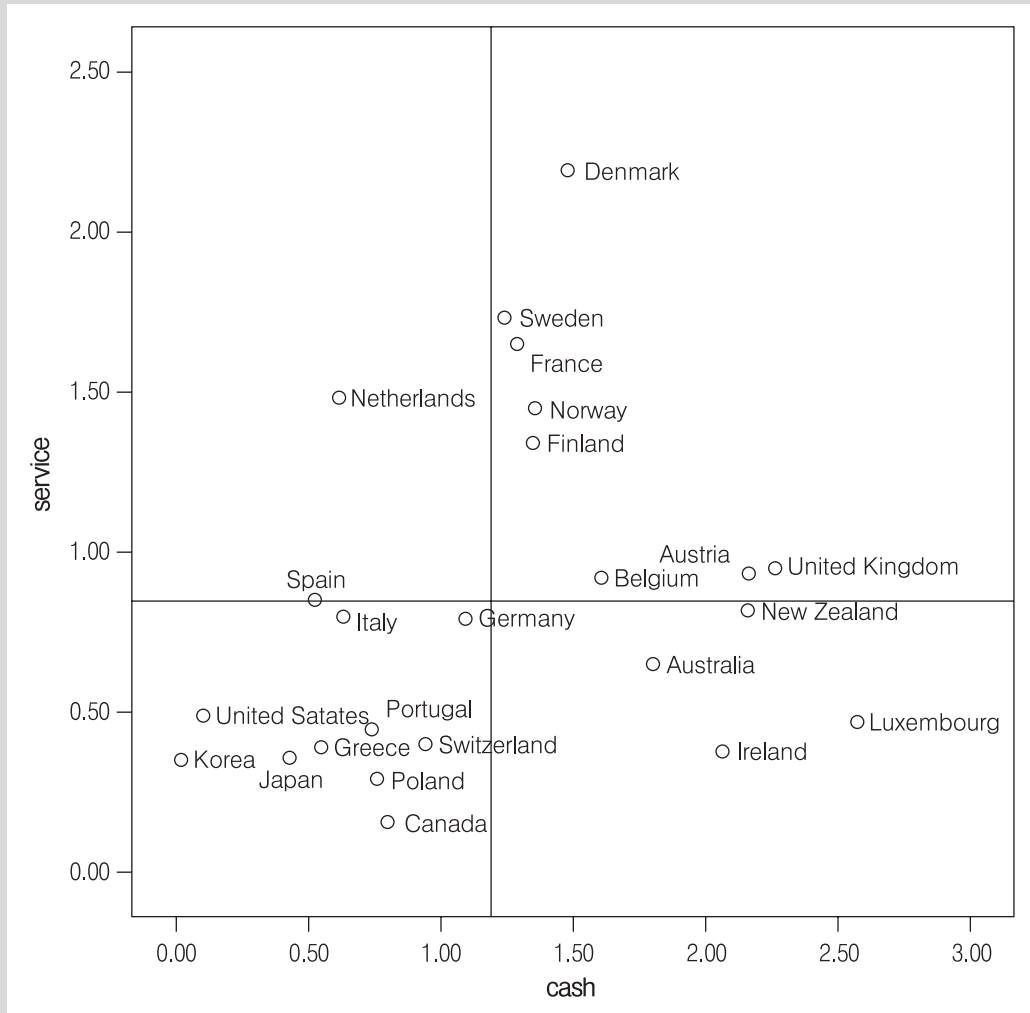
위한 현금급여(case)와 현물급여(service) 분포에서 평균을 중심으로 각 국가의 위치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림 3]의 Scatter plot을 통해 살펴본 결과 현금 및 현물급여 모두의 비중이 모두 높은 국가는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와 같은 사회민주주의 국가와 프랑스, 오스트리아, 벨기에 등의 보수주의 국가 및 유일한 자유주의 국가인 영국이었다. 현금지출 비중이 서비스지출 비중보다 높은 국가로는 룩셈부르크를 제외하고 모두 자유주의 국가이다. 여기에는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가 포함된다. 즉, 자유주의 국가는 현금지출을 서비스제공보다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현금급여도 낮고 서비스도 낮은 국가는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캐나다, 일본과 같은 자

유주의 국가가 많고, 독일은 스위스와 함께 보수주의의 국가군으로 이 유형에 속한다. 이 밖에 남유럽 국가인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그리고 동유럽 국가인 폴란드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양자 모두 낮은 수준이나, 현금보다는 현물지출이 약간 더 높은 상황이다. 이는 우리나라 아동복지 중 아동보호 분류된 영유아 보육서비스와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제공되는 방과후 사업의 비중이 높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현금지출은 미미한 수준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편적인 복지정책인 아동수당 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림 3. GDP 대비 아동가족복지지출 비중: 현금 및 서비스 비교(2007년)

(단위: %)



주: X, Y 중심축은 평균임.
 자료: OECD(2007). Family Database.

4. 아동가족복지지출의 효과성

1) 아동가족복지지출과 아동빈곤율

아동가족복지지출 수준이 아동의 복지에 영

향을 미치는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국의 아동빈곤율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중위소득 50% 미만으로 정의된 아동빈곤율은 최근인 2003/2004년 제6차 룩셈부르크 소득조사자료(Luxembourg Income Study: LIS)에 의하면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사민주의 국가가 가장 낮은 평균 6.1%이고, 그 다음은 보수주의 국가로 8.1%이다. 반면 빈곤율이 높은 국가는 자유주의 국가로 13.6%인데, 이는 남유럽국가 아동빈곤율 12.9%에 비해서 0.7%p 높은 수치이다.

아동빈곤율의 지난 20여년간의 추이를 보면 [그림 4]와 같이, 전반적으로 사민주의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상승하고 있는 추이를 보인다. 다만 남유럽 국가의 경우 2, 3차 조사 기간인 1985년 및 1990년에는 아동빈곤율이 다소 감소하다

표 2. 복지국가 유형별 아동빈곤율 비교

(단위: %)

| 국가 | | 1차 1981/79 | 2차 1985 | 3차 1990/88 | 4차 1995/94 | 4차 1995 | 4차 1997/98 | 5차 2000/01 | 6차 2003/04 |
|-----------|-------|---------------|-------------|---------------|---------------|-------------|---------------|---------------|---------------|
| 자유 주의 | 호주 | 11.3 | 11.8 | 12.2 | 11.4 | - | - | 13.0 | 12.0 |
| | 캐나다 | 12.4 | 11.4 | 11.0 | 11.3 | 11.9 | 12.9 | 12.4 | 13.0 |
| | 일본 | - | - | - | - | - | 14.6 | 14.3 | 13.7 |
| | 한국 | - | - | - | - | - | - | - | 14.0 |
| | 영국 | 9.2 | 9.1 | 14.6 | 10.8 | 13.4 | - | 13.7 | 11.6 |
| | 미국 | 15.8 | 17.8 | 18.1 | 17.8 | 16.9 | - | 17.0 | 17.3 |
| | 평균 | 12.2 | 12.5 | 14.0 | 12.8 | 14.1 | 13.8 | 14.1 | 13.7 |
| 보수 주의 | 오스트리아 | - | 6.7 | - | 8.7 | 10.6 | 8.0 | 7.7 | 7.1 |
| | 벨기에 | - | 4.5 | 4.6 | 5.2 | 8.7 | 8.0 | 8.1 | - |
| | 룩셈부르크 | - | 5.3 | 4.5 | 3.9 | - | 6.2 | 6.1 | 8.8 |
| | 프랑스 | - | 7.4 | 8.9 | 8.0 | - | 7.3 | - | - |
| | 독일 | 5.3 | 5.8 | 5.8 | 8.2 | - | - | 8.4 | 8.6 |
| | 스위스 | 7.6 | - | 9.3 | - | - | - | 7.7 | 8.0 |
| | 네덜란드 | - | 3.9 | 4.7 | 6.3 | 8.1 | - | 4.9 | - |
| | 평균 | 6.5 | 5.6 | 6.3 | 6.7 | 9.1 | 7.4 | 7.2 | 8.1 |
| 사민 주의 | 덴마크 | - | 10.1 | 7.2 | 5.2 | - | - | 5.4 | 5.6 |
| | 핀란드 | - | 5.4 | 5.7 | - | 4.2 | - | 5.4 | 6.5 |
| | 노르웨이 | 4.9 | 7.2 | 6.4 | - | 6.9 | - | 6.4 | 7.1 |
| | 스웨덴 | 5.3 | 7.5 | 6.7 | - | 6.6 | - | 6.6 | 5.6 |
| | 평균 | 5.1 | 7.2 | 6.3 | 5.8 | 7.2 | - | 5.8 | 6.1 |
| 남유럽 국가 | 그리스 | - | - | - | - | 15.4 | - | 14.3 | 12.5 |
| | 이탈리아 | - | 10.5 | 11.2 | 14.0 | - | - | 14.2 | 12.1 |
| | 포르투갈 | - | - | - | - | - | - | - | - |
| | 스페인 | 12.1 | - | 10.1 | - | 13.7 | - | 14.2 | 14.1 |
| | 평균 | 12.1 | 10.5 | 10.7 | 14.0 | 14.6 | - | 14.2 | 12.9 |

자료: Luxembourg Income Study home page. <http://www.lisproject.org/key-figures/key-figures.htm>

가 다시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아동가족복지지출의 규모와 아동빈곤율과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가족지출이 많은 사민주의 국가에서 아동빈곤율이 가장 낮았고, 그 다음으로 지출을 많이 하는 보수주의 국가에서의 아동빈곤율이 두 번째로 낮았다. 반면, 아동가족복지지출 규모가 낮은 자유주의 및 남유럽국가의 아동빈곤율은 높은 편이었다. 특이한 점은 남유럽국가의 아동빈곤율이 자유주의국가보다 약간 낮은 추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 영국과 미국은 아동에 대한 조기 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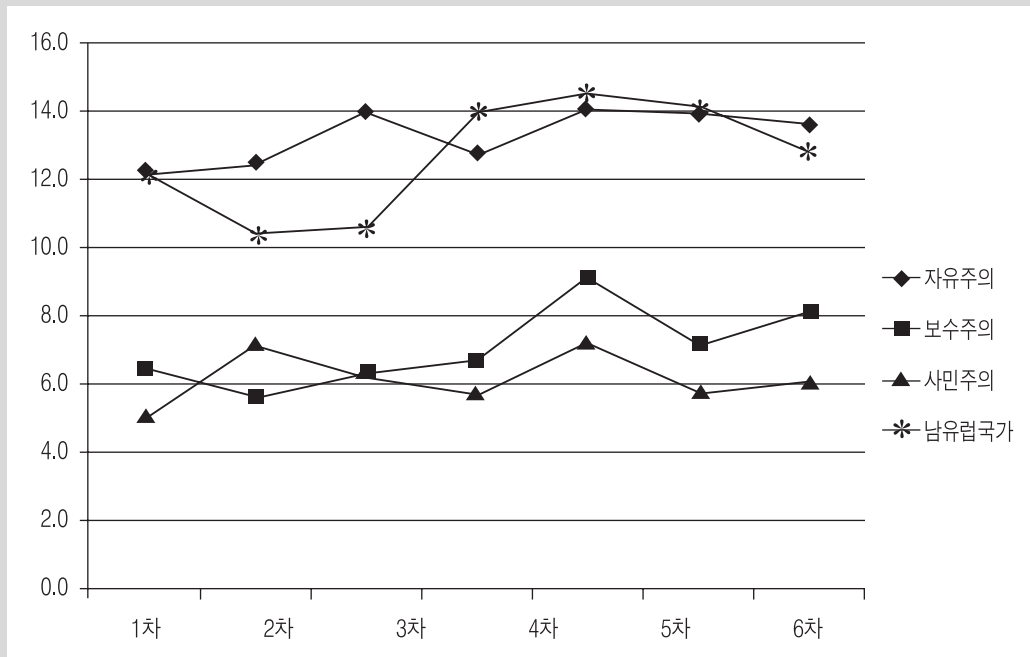
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동빈곤율은 많이 감소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다른 정책적 대안 마련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영국의 경우는 아동에 대한 투자를 매우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향후 이러한 투자의 결실이 거두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2>에서도 제시되었듯이 제6차 조사인 2003/4년도 영국의 아동빈곤율은 전년대비 2.1%p나 떨어졌다. 이러한 양상이 더욱 나타날 것으로 본다.

2) 지출유형별 아동빈곤율

이번에는 아동가족복지지출 현금급여, 현물

그림 4. 복지국가 유형별 아동빈곤율 비교(1979~2004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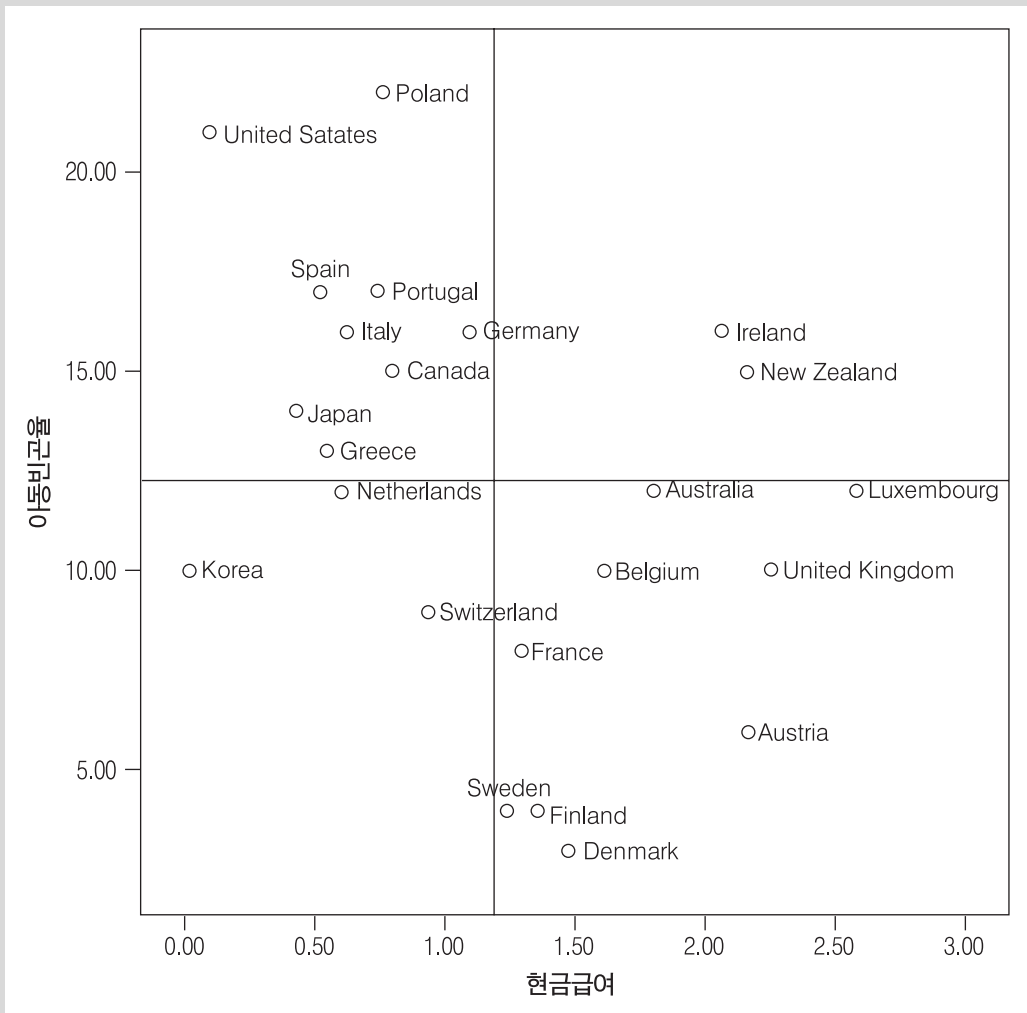
자료: Luxembourg Income Study home page. <http://www.lisproject.org/key-figures/key-figures.htm>

급여, 세제혜택의 3 유형으로 분리하여 복지국가 유형별 지출규모와 아동빈곤율 수준을 살펴 보았다. 여기서는 OECD SOCX database 대신에 Family Database를 사용하여 세제혜택의 규모를 파악하였다.

우선 현금급여와 아동빈곤율과의 관계를 살펴 보았다. 분석 결과, [그림 5]와 같이 아동 및 가족에 대한 현금지출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아동빈곤율이 낮았다. 아동가족지출비율이 높고 아동빈곤율은 낮은 국가에는 스웨덴, 핀란

그림 5. 아동가족 현금지출비중과 아동빈곤율과의 관계(2007년)

(단위: %)



주: X, Y 중심축은 평균임.
 자료: OECD(2007). Family Database.

드, 덴마크와 같은 사민주의 국가와, 프랑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같은 보수주의 국가가 해당한다. 일부 자유주의 국가인 호주와 영국도 이 국가군에 속하고 있다. 반면 현금지출 비중은 높는데 비해 아동빈곤율은 높은 국가는 아일랜드와 뉴질랜드 두 국가이다. 이러한 국가들은 아동빈곤율을 낮추기 위해 다른 전략들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나 일자리 창출과 같은 경제지표상의 개선을 들 수 있다.

현금지출은 낮고 아동빈곤율은 높은 국가에는 미국, 일본, 캐나다 등 대부분의 자유주의 국가와 유일한 보수주의 국가인 독일, 그리고 남유럽 국가들이 포함된다. 이러한 국가들은 아동빈곤율 감소를 위해 사회적인 관심과 함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특이한 유형으로 현금지출 비중은 낮는데 아동빈곤율도 낮은 국가로는 한국, 네덜란드, 스위스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아동빈곤의 수준이 평균이하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현상이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을런지는 의문이 간다. 특히 전체 빈곤가구의 증가에 따라서 아동빈곤가구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정책적인 개입을 통해 증가하는 빈곤율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현물지출 비중과 아동빈곤율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림 6]과 같이 여기서는 현금에서보다 더욱 뚜렷한 부적 상관관계를 볼 수 있다. 현물지출비중이 높을수록 아동빈곤율은 낮았다. 이 유형에 속하는 국가로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와 같은 사민주의 국가가 현저하게 눈에 띄고, 아울러 보수주의 국가인 프랑스, 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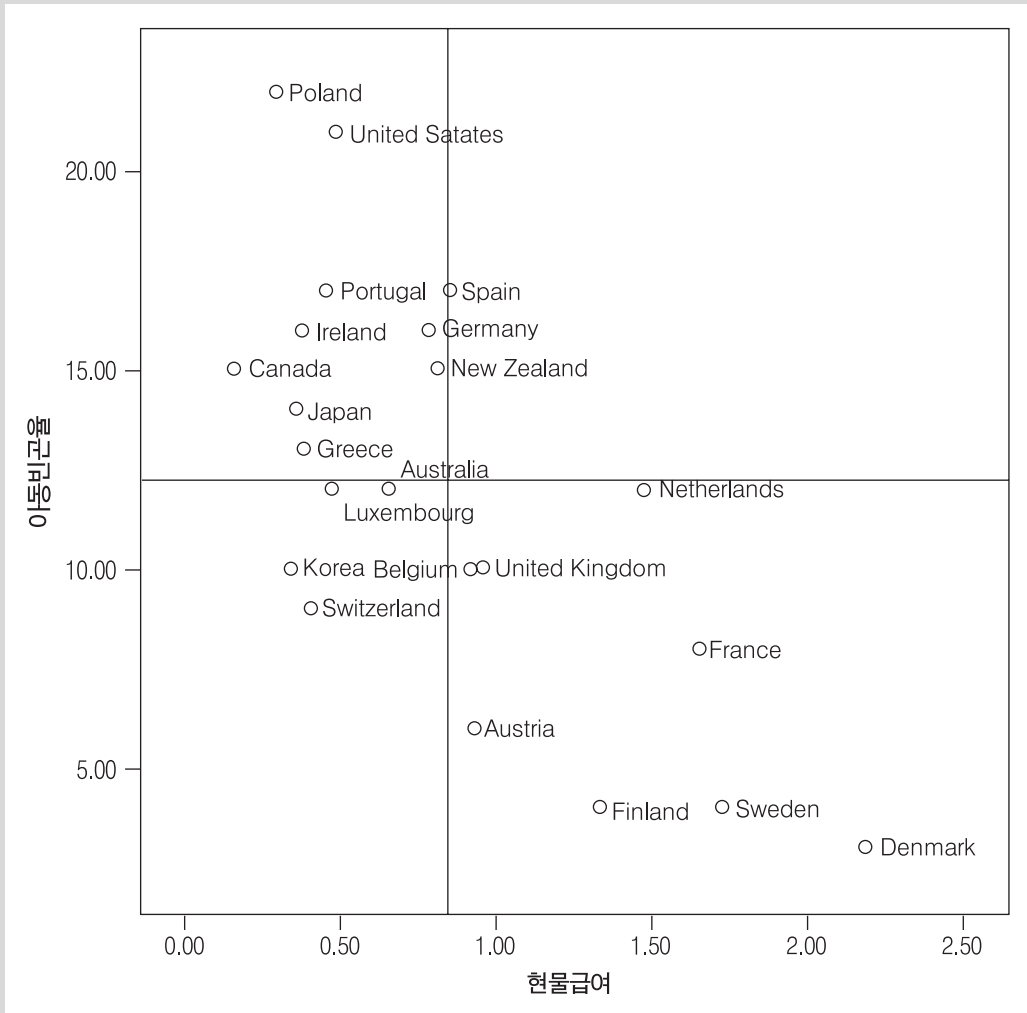
덜란드, 오스트리아가 있다. 자유주의 국가로는 유일하게 영국이 이 유형에 속한다. 현물지출 비중은 높지만, 아동빈곤율은 높은 국가는 한 국가도 없었다. 즉, 현물급여는 아동빈곤율 완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일부 국가들은 현물지출 비중은 낮는데 비해, 아동빈곤율도 낮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는 한국,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위스, 호주 등이 있다. 이러한 국가들은 사회의 다른 정책적 요소와 경제적 환경으로 인해서 아동빈곤율이 낮은 결과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급속한 경제성장 등과 같은 양호한 사회지표의 영향으로 아직까지는 아동빈곤율이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회환경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으므로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한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현물지출은 낮고 아동빈곤율이 높은 국가에는 자유주의 국가(미국, 아일랜드, 뉴질랜드, 일본, 캐나다)와 독일 및 남유럽 국가들이다. 이러한 국가들은 앞에서 살펴본 현금급여도 적게 제공하는 국가이며, 따라서 아동복지에 대해 매우 소극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세제혜택관련 지출과 아동빈곤율과의 관계는 앞의 두 지출보다는 일정한 관계를 찾기가 용이하지 않다. [그림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세제혜택 비중이 높고 아동빈곤율이 낮은 국가로는 프랑스, 벨기에가 있고, 호주와 영국도 이에 속한다. 세제혜택 비중은 높는데, 아동빈곤율은 높은 국가로는 일본, 독일, 미국, 폴란드가 속한다. 세제혜택은 낮고 아동빈곤율은 높은 국가군에는 남유럽국가와 뉴질랜드, 아일랜드, 캐나다 같은 자유주의 국가가 속한다. 나머지는

그림 6. 아동가족 현물지출비중과 아동빈곤율과의 관계(2007년)

(단위: %)



주: X, Y 중심축은 평균임.
 자료: OECD(2007). Family Database.

세제혜택과 아동빈곤율 모두 낮은 국가로 우리나라가 속하고 이 밖에 스웨덴, 오스트리아, 스위스, 네덜란드가 포함된다.

세제혜택에서는 사회민주주의 국가는 세제혜택지원 비율이 낮았고, 오히려 자유주의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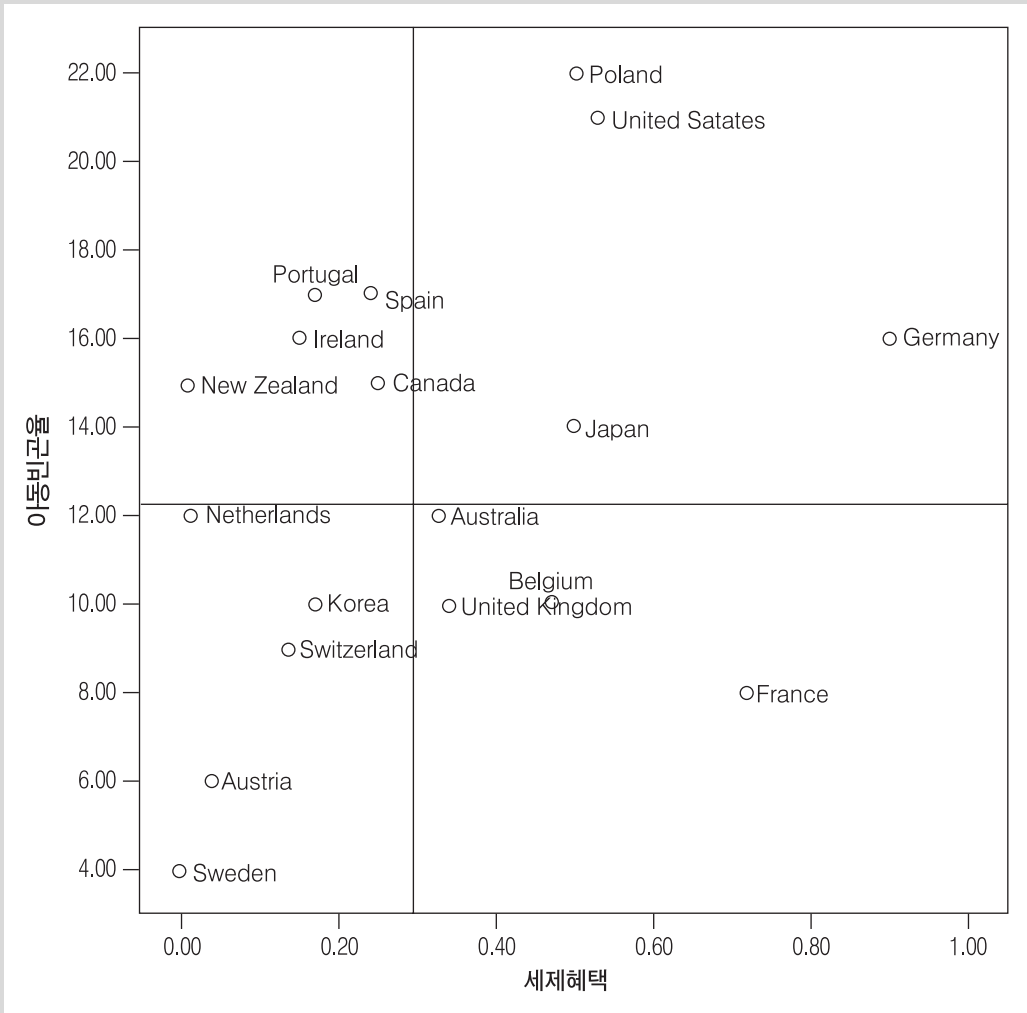
들이 세제혜택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독일은 세제혜택 비중은 가장 높는데 비해서 아동빈곤율은 낮지 않은 국가로, 이러한 혜택이 아동빈곤율을 낮추는 데는 효과적이지 않음을 보여준다. 세제혜택은 아동가구 가구주의 근로참여를 독

려하는 방안으로 볼 수 있다.⁵⁾ 이는 직접적인 현금보다는 간접적으로 소득을 보전해 주는 기제로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제도는 근로참여의 경

우 혜택을 받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런데 본 연구 결과 세제혜택보다는 아동빈곤율에 실효성이 있는 정책은 '현물급여'로 파악되었다.

그림 7. 아동가족관련 세제혜택과 아동빈곤율과의 관계(2007년)

(단위: %)



주: X, Y 중심축은 평균임.
 자료: OECD(2007), Family Database.

5) 김미숙 · 홍석표 · 김기현 · 정재훈 · 안수란(2010). 아동복지정책 유형과 효과성 국제비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에 대한 실증적인 후속 연구가 요구되고, 아울러 우리나라와 같이 지출 및 효과성 면에서 예외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아동의 삶의 질이 담보될 수 있는지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고민이 요구된다. 특히 UNICEF 기준 우리나라의 아동 삶의 질은 객관적인 수준은 양호하나, 주관적인 복지인식은 20개국 중 최하인 바,⁶⁾ 물질적인 지원보다는 서비스 지원을 통해서 피폐해지고 있는 아동 삶의 질 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서비스 지원 수준을 어떻게 고도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후속 연구 과제로 남겨 놓는다.

마지막으로 현금, 현물, 세제혜택 지출을 모두 합한 것과 아동빈곤율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그림 8]과 같이 대체적으로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즉, 아동가족지출비중이 높을수록 아동빈곤율이 낮았다. 아동가족복지지출 비중이 높고 아동빈곤율이 낮은 국가로는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와 같은 시민주의 국가와 프랑스, 오스트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의 보수주의 국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자유주의 국가로는 영국과 호주가 있다. 아동가족지출이 높음에도 여전히 아동빈곤율이 높은 국가로는 독일, 아일랜드, 뉴질랜드가 있다. 이러한 국가에서는 복지지출의 비효율성 및 비효과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보다 실질적인 정책이 요구된다. 반면 아동가족복지지출은 낮음에도 아동빈곤율도 낮은 국가는 한국과 스위스, 그리고 네덜랜드가 있다. 나머지 국가는 아동가족복지지출 비중은 낮고 아동빈곤율

은 높은 국가로 캐나다, 일본, 미국 등과 같은 자유주의 국가와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와 같은 남유럽국가에 속한다.

5. 결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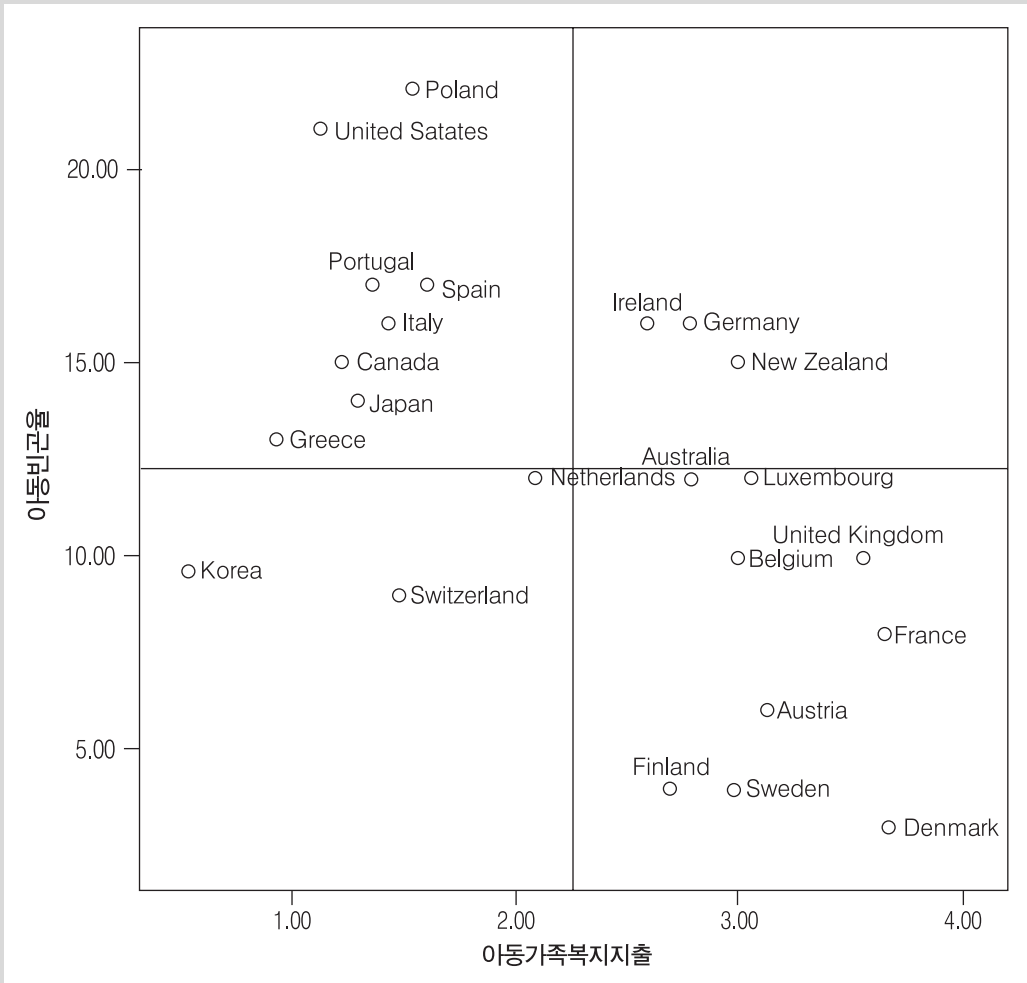
본 고에서는 주요 외국과 우리나라의 아동가족복지지출의 규모를 살펴보았고, 지출의 효과성의 지표로 아동빈곤율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아동가족복지지출은 시민주의국가가 가장 비율이 높았고, 보수주의, 자유주의, 남유럽국가의 순이었다. 지난 27년간의 변화를 보면 시민주의는 아동가족복지지출이 상승되다가 1995년 전후에 이르러 복지지출이 삭감되는 추이이고, 보수주의는 약간의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1990년 이후 정체를 보이고 있다. 반면, 자유주의는 1990년대까지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최근에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인다. 남유럽국가도 증가추세에 있다. 즉, 복지국가 레짐별로 보았을 때, 아동가족복지지출을 수렴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복지지출의 효과성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아동가족복지지출이 많을수록 아동빈곤율은 낮았다. 특히 현물급여와 아동빈곤율과는 부적인 상관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금, 현물, 세제혜택 모두 낮은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아동빈곤율도 낮은 특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아동의 주관적 삶의 질은 20개국 중 최하위로 나타나 이것 또한 예외

6) 김미숙 · 홍석표 · 김기현 · 정재훈 · 안수란(2010). 아동복지정책 유형과 효과성 국제비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그림 8. 아동가족복지지출 전체와 아동빈곤율과의 관계(2007년)

(단위: %)



주: 1) X, Y 중심축은 평균임.

2) 전체 아동가족복지지출에는 현금지출, 현물지출과 세제혜택 비용이 포함됨(GDP 대비 비율임).

자료: OECD(2007), Family Database.

적인 상황이다. 다시 말해서 가족이 아동복지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회문제의 복잡화로 얼마나 이러한 상황이 아동의 삶의 질을 담보할 수 있을런지는 의문의여지가 있다.

향후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

해 현물급여의 집중이라는 방향은 적절하나, 거의 미미한 수준인 현금급여의 수준 제고 규모를 파악하고, 보다 내실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의 개선과 이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평가가 요구된다. 보건복지